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요구

제 목 피복 구매 등 분할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방서 ○○○○○에서는 2016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소방공무원 피복 등을 구입하면서 16건, 56,684,4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신안정실 물품을 구입하면서 8건, 39,922,730원을 지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되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 시 확인된 사항

☆☆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년 직원 소방 피복구입 및 2017년 ☆☆소방서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 시 동일시기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분할 발주·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분할발주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예산 과목	계약일자	사업명	계약금	계약자	예산낭비
사무 관리비	소계	7건	41,459,470		4,975,130
	2016-03-28	2016년 직원 소방 피복 구입	3,097,230	○○○○	
	2016-03-28	2016년 직원 소방 피복 구입	1,349,520	○○○○	
	2016-03-28	2016년 직원 소방 피복 구입	20,415,820	○○○○	
	2016-03-28	2016년 직원 피복(신발류) 구입	5,801,000	◇◇◇	
	2016-03-28	2016년 직원 피복(방한복) 구입	6,528,000	◇◇◇	
	2016-03-28	2016년 직원 피복 구매에 따른 피복부착물 구입	618,900	◇◇◇	
	2016-02-04	소방공무원 피복류(훈련화) 추가 구입	3,649,000	(주)◆◆◆	
자산및 물품 취득비	소계	6건	38,153,230		4,578,380
	2017-06-30	심신안정실 물품(수압마사지기) 구매	9,700,000	(주)◆◆◆	
	2017-07-20	심신안정실 물품(안마의자) 구매	10,500,000	(주)◆◆◆	
	2017-06-30	심신안정실 물품(공기정화살균기, 무릎마사지기) 구매	7,840,000	(주)◆◆◆	
	2017-09-21	심신안정실 물품(혈압계) 추가 구매	1,223,230	(주)◆◆◆	
	2017-09-01	심신안정실 물품(리클라이너쇼파) 구매	2,420,000	□□□	
	2017-06-30	심신안정실 물품(의료조합자극기, 족욕기) 구매	6,470,000	▲▲▲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는 피복구매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물품구매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신안정실 물품 구매의 경우는 의료기기 종류가 복잡하여 유사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 구매하였으나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발주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알게 되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소방서장은 소방서 피복구매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교(현 ☆☆119안전센터) ★★★, 지방소방교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② 이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요구

제 목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서는 2016. 4. 11. ♣♣시 소재 ●●●건설(주) 대표 안○○와 759백만원에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4. 착공하여 2016. 11. 30. 준공하였다.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읍	900	759	141	'16.4.14.~ '16.11.30.	●●●건설(주)	준 공

2. 건축물 공사 완료 통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 허가권자(☆☆시장)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위의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2016. 11. 11.인 준공기한을 넘겨 2016. 11. 30.에 준공신고서를 받았으며, 건축물의 창호 등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시(◆◆◆◆◆)에 2016. 12. 8. 건축물 공사완료 통보하여 미완성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2016. 12. 11. 등재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공사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은 공제)을 지연배상금으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이하 ‘일반조건’) 제9절 1. **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일반조건 제9절 2. **공사목적물의 인수**에서는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3. **기성부분의 인수**에서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8절 1. **지연배상금**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

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배상금 부과시에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연배상금 계산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성부분 검사를 통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위의 공사의 경우 준공기한(2016. 11. 11).을 경과한 2016. 11. 30.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여 2017. 2. 3.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2016. 11. 12.부터 2017. 2. 3.까지 총84일에 대하여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713백만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지연배상금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에 부속된 창호는 건축물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완성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준공검사 완료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한 건축물 대장 등재 행위가 검사완료 통지 등의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공사목적물의 인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인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연배상금 계산시 ‘완성부분 인수’에 따른 공제 대상이 없는데도,

☆☆소방서에서는 아래 [표 1]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과 같이 지연배상금 계산시 2016. 12. 11. 건축물대장 등재일을 기준으로 창호 등이 미완성된 건축물을 인수한 것으로 하고, 이를 공제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1]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

기 간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84일	17,087,763	
2016. 11. 12. ~ 2016. 11. 28.	$713,535,945\text{원} \times 0.1\% \times 17\text{일}$	12,130,111	계약금액(건축물 전체)
2016. 11. 29. ~ 2016. 12. 11.	$713,535,945\text{원} \times 0.05\% \times 13\text{일}$	4,637,984	"
2016. 12. 12. ~ 2017. 02. 03.	$11,839,577\text{원} \times 0.05\% \times 54\text{일}$	319,668	건축물 공제 (창호만 계산)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지연배상금률 0.1% → 0.05%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6. 11. 29.)

- 이 규칙 시행전에 지연배상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래 [표 2] ‘지연배상금 정상 부과’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경우 약 36,033천원인데도 부과한 금액은 17,087천원으로 약 18,946천원 상당 과소 부과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2] 지연배상금 정상 부과

기 간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84일	36,033,565	
2016. 11. 12. ~ 2016. 11. 28.	713,535,945원 × 0.1% × 17일	12,130,111	계약금액(건축물 전체)
2016. 11. 29. ~ 2017. 02. 03.	713,535,945원 × 0.05% × 67일	23,903,454	"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장은 상기 감사지적에 대하여 검토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과소부과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정상 부과 세입처리 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건축물 공사 완료 통보와 지연배상금 부과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 전 실무담당자 **지방소방교** ◇◇◇(현, ☆☆☆☆☆)과 ○○○○○ 전 실무책임자 **지방소방경** ◇◇◇(현,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고,(경고)

②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요구

제 목 특허공법 반영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서는 2017. 6. 15. △△도 ▲▲시 소재 (주)▼▼▼▼(대표 김○○)와 특허공법 반영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29백만원에 「☆☆소방서 심신안정실 산소방(O2폴케어서스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착공하여 2017. 6. 30. 준공하였다.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소방서 심신안정실 산소방 (O2폴케어서스템) 설치공사	☆☆ 소방서	29	29	-	'17.6.15.~ '17.6.30.	(주)▼▼▼▼	준 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거나,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특허공법이 공사전체에 적용(85.72% 이상)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

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전체공사 중 특허적용 부분이 85.72%이상 포함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야만 특허 보유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소방서에서 위의 공사 계약 전에 유사기술 비교자료와 특허반영 필요성을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유사 기술의 비교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공사 내용에 특허공법 반영이라는 이유만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히 하였다.

또한, 수의계약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업체가 공사계약 이행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한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특허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장은 상기 감사지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 검토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추진 등 업무를 소홀히 한 ○○○○○ 전 실무담당자 **지방소방교** ◆◆◆(현, ☆☆☆☆☆)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 전 실무책임자 **지방소방경** ◆◆◆(현, ☆☆☆☆☆)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급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경고)

② 앞으로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요구

제 목 구급의약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서에서는 매년 업무에 필요한 응급처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 및 보관, 폐기 등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구급장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에 의하면, 구급의약품의 보유기준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운영에서는 구급장비담당자는 의약품의 배정, 소모, 유효기간 도래로 폐기한 경우 의약품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유효기간이 도래된 의약품은 문서로 보고한 후 폐기처분 시에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 폐기물 처리함에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업무 소홀

그런데도, ☆☆소방서에서는 아래 [표 1]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보관 현황’과 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84일 경과 후 폐기 하는 등 6개 품목의 60개 의약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폐기처리 하여 의약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보관 현황

부 서 명	품 명	단 위	수량(개)	유효기간	폐기일자	경과일수
합 계	6개 품목		60			
☆☆안전센터	니트로글리세린	병	1	'17. 7. 21	'17. 10. 13	84일
▽▽안전센터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병	1	'18. 5. 9	'18. 5. 16	7일
▲▲안전센터	포도당 수액용(10%)	팩	2	'17. 7. 6	'17. 7. 11	5일
▲▲안전센터	비마약성 진통제 (트리마돌)	앰플	22	'18. 10. 5	'18. 10. 30	25일
□□지역대		앰플	9	'18. 10. 5	'18. 10. 13	8일
●●●		앰플	10	'18. 10. 5	'19. 1. 3	90일
△△안전센터	에피네프린	앰플	2	'19. 1. 10	'19. 1. 30	20일
●●●	아미오다론	앰플	1	'17. 4. 30	'17. 5. 9	9일
▲▲안전센터		앰플	6	'18. 9. 30	'18. 10. 30	30일
●●●		앰플	6	'18. 9. 30	'19. 1. 3	95일

나. 구급의약품 무단폐기

또한, 아래 [표2] ‘구급의약품 보유 및 폐기 현황’과 같이 비마약성진통제(트리마돌)의 경우 2016. 3. 28.에 50앰플을 구입하여 2016. 5. 10. ~ 2018. 3. 23.까지 8앰플 지출(투약)하였으며, 이후 2018. 10. 5.자로 유통기한이 도래된 구급의약품(41앰플)에 대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3차례 나누어 유효기간이 8일에서 3개월 경과한 후 폐기하였으며, 나머지 1앰플은 무단폐기 한 사실이 있으며,

기관지확장제의 경우 2차례에 걸쳐 60앰플 구입한 이후, 2017. 7. 25.자로 유통기한이 도래한 구급의약품 12앰플에 대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하였으나, 나머지 48앰플은 무단폐기하는 등 구급의약품(트리마돌, 기관지 확장제) 49앰플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구급의약품 보유 및 폐기 현황

약 품 명	구 입(앰플)			사 용(앰플)	폐 기(앰플)		보유량	무단폐기
	수 량	년월일	유효기간		수 량	년월일		
비마약성 진통제 (트리마돌)	50	'16. 3. 28	'18. 10. 5	8 ('16.5.10. ~ '18.3.23.)	22	'18. 10. 30	-	1
					9	'18. 10. 13		
					10	'19. 1. 3		
기관지확장제 (의료용분무기 용)	20	'16. 3. 28	'17. 7. 25	-	12	'17. 7. 25	-	8
	40	'17. 3. 28	'18. 2. 27	-	-	-	-	40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에서는 무단폐기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구급의약품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무단폐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 전 실무담당자 지방소방교 ●●●(현, ○○○○○○), 지방소방교 ●●●(현, ○○○○○○), 지방소방교 ●●●(현,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② 앞으로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요구

제 목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소홀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비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는 지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감사기간(2016. 5월~2019년 5월) 중 비위 소방공무원에 대해 5건의 징계처리를 하였다.

2.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가중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소방서에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면서, 지방소방위 ☆☆☆의 경

우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동료직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결과에 대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 요구와, 지방소방사 ☆☆☆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추가 고소된 폭행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7(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나항, 마항 위반으로 결과보고 후 □□□ 요구를 하면서,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개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징계요구 당시 양정 가중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가중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함에도, 지방소방사 ☆☆☆의 경우 가중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지방소방위 ☆☆☆ 경우 자체 결과보고서(관련규정 명시)만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여 가중사유가 검토되지 않고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징계의결 요구 소홀 현황>

소속	계급	성명	징계요구일	징계요구	징계처분	비 고
○○119 안전센터	지방소방위	☆☆☆	18.08.09.	○○○	▽▽▽▽ (18.08.23.)	견책에서 포상감경
◇◇◇◇◇◇◇	지방소방사	☆☆☆	18.10.18.	□□□	▽▽▽▽ (19.05.09.)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 ○○○○○는 법령 연찬 부족 등으로 이 건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가중사유 처리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지방소방경 ▽▽▽**과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위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감리지정 신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소방시설법」 제7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6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 확인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아래 표 “건축물 동의 및 완공 현황”과 같이 ○○○ 건축물(근린생활)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1층 1,125.51, 2층 1,310.87)를 초과하여 1개 층에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계·시공하면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건축물 동의 및 완공 현황】

대상명	소재지 (건축주)	건축규모	건축허가 동의	착공 및 완공	부적정 내용	비고
▼▼▼ 건 물 (근린생활)	☆☆시 ▽동 00 -4번지 외 1필지 (▽▽▽)	지상2층/ 2,436.38㎡	2017.06.05.	2017.09.26. (2018. 02. 12)	하나의 급수배관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 1000㎡ 초과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1,000㎡)을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인 3,000㎡로 착각하여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업무처리 하였으며, 관계자(설계, 시공, 감리,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누락된 소방시설을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감기관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소방서 △△△△△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장 ○○○○(현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

② ■■■■ 건축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 조치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 감리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엔지니어링)에게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고, (시정,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③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가능 면적 산정 소홀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방서 ◆◆◆◆◆에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가능 면적 산정 확인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의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설치(완공)신고서에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가 표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소방서 ◆◆◆◆◆에서는 2017. 7. 7. 설치신고(완공신고 : 2017. 7. 12.)한 ♥♥♥♥(휴게음식점)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업무에 있어,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려는 면적은 영업장 천장과 벽면을 합한 면적(308.08㎡)의 10분의 3인 92.42㎡

[표1] 이하로 방염처리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방염대상인 철근과 합판으로 이루어진 간이벽면 9개소의 면적 202.47㎡를 포함하여 510.54㎡로 불연화 면적으로 산정, 510.54㎡의 10분의 3인 153.16㎡[표2] 이하로 방염가능 면적을 산정하여, 92.42㎡를 초과한 119.17㎡(26.75㎡ 초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였다.

【표1. 법령상 방염가능 면적】

연번	대상물품	가로(㎡) × 세로(㎡)	면적(㎡)	마감자재	
1	천장		181.87	콘크리트	
2	외벽면	64.4 × 3.3	212.52	콘크리트, 타일, 불연석고, 유리	
3	제외면적	출입구, 비상구, 창문 등	86.31		
합계			308.08		
방염가능 면적(실제 방염면적 119.17㎡)			92.42	38.68%	

※ 308.08㎡ × 0.3 = 92.42㎡, (119.17㎡ / 308.08㎡) × 100 = 38.38(30% 초과)

【표2. ♥♥♥♥ 방염면적 산정 현황】

연번	대상물품	가로(㎡) × 세로(㎡)	면적(㎡)	마감자재	
1	천장		181.87	콘크리트	
2	외벽면	64.4 × 3.3	212.52	콘크리트, 타일, 불연석고, 유리	
3	간이벽면1	(5.35 × 2) × 3	32.10	불연석고	
4	간이벽면2	{(6.55 + 1.05) × 2} × 3	45.60	불연석고, 타일	
5	간이벽면3	(1.15 + 1.2) × 2.3	5.41	철근, 합판	
6	간이벽면4	{(1.37 + 1.19) × 2} × 2.3	11.78	철근, 합판	
7	간이벽면5	{(1.17 + 1.19) × 2} × 2.06	9.72	철근, 합판	
8	간이벽면6	{(1.17 + 1.19) × 10} × 2.35	55.46	철근, 합판	
9	간이벽면7	{(1.18 + 1.21) × 6} × 2.38	34.13	철근, 합판	
10	간이벽면8	(1.44 × 2) × 1.2	3.46	철근, 합판	
11	간이벽면8	(1.44 × 2) × 1.67	4.81	철근, 합판	
12	제외면적	출입구, 비상구, 창문 등	86.31		
합계			510.54		
방염가능 면적(실제 방염면적 119.17㎡)			153.17	23.34%	

※ 510.54㎡ × 0.3 = 153.17㎡, (119.17㎡ / 510.54㎡) × 100 = 23.34(30% 이하)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 ♣♣♣♣♣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설치신고 시 도면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방염가능면적의 26.75㎡를 초과하여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게 되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실내장식물 방염가능면적을 확대 해석하여 규정보다 초과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에서는 2017년 7월 12일 ♡♡♡♡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방염가능면적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장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고, (경고) 방염가능면적이 초과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에 대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시정조치하기 바라며,(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 실시

소 관 기 관 ☆☆소방서(△△△△△)

조 치 기 관 ☆☆소방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방서 ▽▽▽▽▽에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신축 건축물 1급대상물(9개소), 2급대상물(61개소), 3급대상물(71개소) 총 141개 대상 중 135개 대상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소방서 ◆◆◆◆◆에서는 아래 표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 실시 현황” 2016년 2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물 총 141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사항을 관할119안전센터에 시달하여 기한 내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을 알렸으나,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6개소(◎◎센터 4, ☆☆센터 2)의 신축 건축물(□□□□ 외 5개소)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미 실시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 실시 현황】

연번	건물명	주 소	사용승인일	자료조사일	실시여부	관할센터
1	△△빌딩(○○○건축물)	☆☆시 ♣♣면 **5로 00-27	2016-11-30	-	미실시	△△센터
2	(주)△△ 0공장	☆☆시 ♣♣면 **리 00-2번지	2018-05-08	-	미실시	△△센터
3	△△♣♣♣마트	☆☆시 ♣♣면 **리 00-16	2018-08-24	-	미실시	△△센터
4	△△빌딩(○○○건축물)	☆☆시 ♣♣면 **리 00-1	2018-08-30	-	미실시	△△센터
5	○○○건물	☆☆시 ☆☆☆ **리 00-6	2018-11-14	-	미실시	☆☆센터
6	♠♠기업(○○○건물)	☆☆시 ♣♣면 **리 00번지	2019-02-01	-	미실시	☆☆센터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담당자는 시도소방 통합포털시스템(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미숙으로 미 실시한 대상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소방서장은 신축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소방서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장 ○○○(현,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경고” 조치하시고(경고), 미 실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시고(시정),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